

STRATEGY 21

통권39호 Vol. 19, No. 1, Spring 2016

북한 핵문제와 한·중 관계의 미래

신정승*

I. 시작하는 글

II. 북한 핵문제와 한중 관계

1. 북한 핵문제 대응과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이견
2.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III. 향후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

1. 미중 간 세력경쟁의 심화
2. 한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
3. 한중 간 국력 차의 확대와 상호 인식의 변화

IV. 맺는 글: 향후 한중 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제언

1. 북한 핵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한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
 2. 새로운 방식을 통한 한중 간 경제협력의 확대
 3.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의 개선
-

* 전(前) 주중 한국대사, 전(前)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현(現)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겸 중국 연구센터 소장.

I. 시작하는 글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지난 24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으며 2008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되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주요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웃 국가이다. 양국 관계가 이와 같이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적으로 상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나 상호 보완적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양국의 공통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15년 9월 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자리를 함께한 이후에는 양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상태’라는 표현마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에 4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2월 7일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륙간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후 북한은 3월 9일의 핵탄두 소형화 및 고도화, ICBM 미사일 공개, 3월 24일의 신형 고체연료 개발 그리고 지난 4월 23일 동해에서의 SLBM 수중 사출 시험 발사를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며 상황을 악화시켰다.¹⁾

한국 정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시험을 금지하기 위해 2003년 이후부터 5회에 걸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였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최근의 WMD 위협 증대가 한반도는 물론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등 자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대북 압박에 대한 한중 간의 온도의 차이와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 차원에서 발표된 미국과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배치 논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상태라는 표

1) 김형구&전수진, ‘북 잠수함, 회항 포기한다면 23년 내 괌 공격 가능,’ 『중앙일보』, 2016년 4월 26일, 6쪽.

현은 아마도 한중 관계의 저변에 흐르는 여러 가지 기류를 살피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 강조되었던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한반도 배치 협상 개시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과장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난 3월말 워싱턴 개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문제 등 몇 가지 현안과 함께 다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²⁾ 3월말 핵안보 정상회의 시 한중 정상 간의 대화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THAAD 배치 문제가 한중 간에 계속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어느 수위와 범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국가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이웃하는 한중 간에도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배치 문제 하나로 지난 20여 년간 쌓아왔던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 THAAD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경쟁의 격화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각기 다른 생각 등 최근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중 관계의 갈등과 향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적 정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할 일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Ⅱ. 북한 핵문제와 한중 관계

1. 북한 핵문제 대응과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이견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한국의 가장 큰 현안임과 동시에 이 문제는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2) 2016.2.23. 워싱턴에서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부장의 공동기자회견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라는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6일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2월 7일에는 소위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크게 높였다.

우리 정부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도발들이 과거와는 그 성격이 다르게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등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와 주한 미군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배치 문제 협의 개시 등 미국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대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양자적, 다자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3월 16일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소위 Secondary Boycott을 포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일본도 북한을 경유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대북 송금 제한 등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³⁾ 한편 다자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금융활동, 교역과 수송을 크게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⁴⁾

그러나 대북제재의 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국은 비록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⁵⁾

이러한 중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필자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유보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하나는 과연 중국이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해 오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는 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⁶⁾ 이는 시진핑 지도

3)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3/16/>, Message blocking the property of the government and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4)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

5) 왕이 외교부장, 2016.2.26. 미국 CSIS에서 연설, “A Changing China and Its Diplomacy” http://www.fmprc.gov.cn/mfa_eng/wjb_663304/wjbz_663308/2461_663310/t1345211.shtml

6) 2016.3.22. 중국국제문제연구원 Su Ge 원장, 필자에게 언급.

부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 왔으며, 북핵 불용에 대해 매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중국은 작년 10월의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평양방문이나 금년 2월초의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중국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확대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 등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배치 협상 개시 결정이나 한국 내의 핵개발 주장 등이 대두됨으로써 중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데 대한 우려도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이번은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는 다르며 중국의 본심은 비핵화에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 주장도 북한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는 기대 섞인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사례로 볼 때, 이러한 견해는 그냥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시진핑 지도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3년 초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비호해주시 말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북한을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한동안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다시 북핵문제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이 우선적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환원된 바 있다. 금번에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4차 핵실험 직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기존 대(對)한반도 정책을 반복하고 관련 당사국들의 냉정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관련국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협의하자는 주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시대에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⁷⁾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민생과 중국의 국가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병행논의의 진전 정도라든가 한미 간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배치 협의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 강도가 조절되거나, 북한으로부터 약간의 대화 움직임만 있어도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부분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는 중국으로서 북한이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핵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 핵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 협의가 시작되면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병행 추진에는 많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는 비록 궁극적으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정책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의 이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이며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은 이러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둘째, 중국 측 주장대로 언젠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병행 교섭을 시작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보다는 평화협정에 비중을 둘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는 중심에서 벗어나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를 조성하면서 협상을 지연시켜 핵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시간을 벌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북한은 정

7) Sukjoon Yoon, 'Plan B,' *CSIS PacNet*, No. 23, March 23 2016.

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평화협정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의 9·19공동성명 내용에 따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언젠가 때가 되어 평화협정체결 문제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증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2.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2014년 6월 주한 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미국 국방부에 THAAD 배치를 건의하였다고 언급한 이후 국내외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다. 한국 측에서는 당초 THAAD 문제는 한미 간에 협의된 바 없으며,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Missile Defense: KAMD)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이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였다는 인식하에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THAAD 도입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세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issile Defense: MD)의 일부분인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가 방어용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태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THAAD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는 이해를 표시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핵미사일보다는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이며, THAAD 체계를 지원하는 AN/TPY-2 X-Band Radar는 중국 동부의 대부분 지역을 탐

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THAAD 배치는 자신의 안보를 위해 제3국의 안보이해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⁸⁾

중국은 또한 만약 한국이 종말단계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스템(THAAD) 배치를 허용할 경우, 한중 간 정치적 신뢰에 큰 손상을 초래할 것이며, 한중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로서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은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THAAD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미사일의 요격 반경은 한반도 내에 국한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레이더는 중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설혹 레이더의 반경이 중국의 일부 지역에 미친다 하더라도 중국을 탐지하는 레이더는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나 타이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중국 안보에 추가적으로 위협이 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중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어떠한 군사적 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넷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결국 중국으로서는 THAAD 배치 자체가 위협이라기보다는 THAAD 배치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의지에 따라 한미동맹이 중국을 향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 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3월말 워싱턴 개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문제 등 미국과 중국 간 몇 가지 현안과 함께 다루어짐으로써 미중 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울러 3월 31일 워싱턴에서 한중 정상 간의 접촉에서도 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한미중 간의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언제라도 다시 한중 간의 중요한 현안으로 표면화될 소지가 있다. 특

8) 신경진, '왕이, 사드 겨냥 항장이 칼춤 추는 것 유방 죽이려는 것,' 『중앙일보』, 2016년 2월 15일, 6쪽.

히 북한의 김정은이 언급한 대로 가까운 시일 내 5차 핵실험이 강행된다면 그 시기는 더욱 당겨질 것이며, 주한 미군의 배치에서 나아가 우리 군의 배치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반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가용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안보이익과 능력을 검토한 후에 THAAD 배치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만일 THAAD를 배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중국의 안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필자로서는 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실제로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단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 대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향후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

1. 미중 간 세력경쟁의 심화

2012년 새로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자고 국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시진핑 지도부는 평화발전의 길을 재확인하고 서구사회에서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등 대국과 상호 존중하고 호혜 공영하는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주변국에 대해서는 대(對)주변국 4대 원칙인 ‘친(親), 성(誠), 혜(惠) 및 용(容)’에 입각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⁹⁾

그렇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 China's Dream)은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사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¹⁰⁾

9) 시진핑,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차혜정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5) 참조.

특히 주권이나 영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의 조어도 문제나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의 강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감안하여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수차에 걸쳐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치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강한 군대 건설과 해양권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중 상호간의 전략적 불신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미국의 대응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은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호주, 한국 등과의 기존 양자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주변국들과의 무역특혜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 6월의 캘리포니아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양국 정상이 만날 때마다 미중 양국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Win-Win 하자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지만 2015년 9월에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시와 같이 미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은 주권과 영토, 중국의 정치사회체제 그리고 경제발전의 여건과 관련된 이익이라는 말로 설명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과거에는 타이완, 신장, 티벳 등에 관한 문제를 핵심이익이라고 해왔지만 이제는 남중국해 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개념을 모호한 상태로 두고 향후 중국의 국력 신장에 맞추어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미국으로서도 이러한 모호한 핵심이익의 '상호 존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의에 냉담한 것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2012년부터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태지역에서의 군비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2015년 2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도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도를 뒷받

10) 조영남, 『중국의 꿈』(서울: 김영사, 2014) 참조.

침하고 있다.¹¹⁾

특히 2015년에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미일동맹을 강화시킨 것과 더불어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중국 인사들의 언급과 같이 비록 공화당 후보인 Trump가 신고립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아시아에서의 동맹 약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실제 대외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¹²⁾ 현재 의회 내의 중국에 대한 분위기로 볼 때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지역문제와 관련된 미중 간의 주요 관심 사안은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이며 이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의 내용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신의 ‘역사적 권리와 이익(historical rights and interests)’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일부 분쟁도서에서 전통적으로 미국이 견지해 온 항해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상공비행 자유(Freedom of Overflight)에 대한 국제법적 권리를 강행하고 남중국해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분쟁 도서에 대한 해상 매립공사 강행 및 인공섬에 대한 군사용 시설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³⁾

중국은 남중국해의 관련 지역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배타적 주권과 해양관할권이 미치는 곳이며 그곳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해상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2015년 9월의 미중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매립과 시설공사가 결코 군사기지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관련국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언급하였다.

금년 2월에 왕이 외교부장도 남중국해의 한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설비가 있는 것은 중국이 해당 도서의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방어시설이라고 하면서 이는 군사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⁴⁾

이에 대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배치는 명백한 군사화의 증

11)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2015, 2).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2015_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12) 2016. 4. 칭화대 예첸통 교수 언급, 2016. 5. 주한 대사관 고위 관계자 견해.

13) Ridzwan Rahmat, ‘A game of chess? South China Sea strategic moves’ *IHS Jane’s Navy International*, March 2016, pp. 6 & 8.

14) 왕이 부장, 기자들에 언급, 2016년 2월 18일자 Global Times 1면 기사.

거이며,¹⁵⁾ 이는 중국이 군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2016년 2월의 미-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소위 ‘항해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실시를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일방적인 역사적 권리 및 이익 보호 행사 조치들을 무력화하려고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해군력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미중 간의 차이는 상당하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차이가 좁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상호간 이견이 확대되고 사안에 따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남중국해 문제는 한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에서의 미중 간 갈등이지만 분쟁수역이 한국의 원유도입이나 무역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과의 분쟁이기에 한반도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장래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들어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한미중 간 전략적 대화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⁶⁾

2.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이었던 한중 경제관계는 지난 20여 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그 토대가 되었다.¹⁷⁾ 과거 한중 간 산업 기술면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투자와 기술협력을 필요로 하였고, 무역면에서도 한국으로부터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중국 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 이를 가공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그 보완성이 대단히 컸고 그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 경제와 산업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양국의 산업은 상호 보

15) 미 태평양사령부 Harris 제독 언급, 상기 Global Times 2면 기사.

16) 이영선, ‘북핵만 다루는 한미중 고위급 채널 개통 필요,’ 『국방일보』, 2016년 1월 27일, 8쪽.

17) 김준술, ‘중국 경제성장을 1% 떨어지면, 한국은 1년 뒤에 0.5% 하락,’ 『중앙일보』, 2016년 4월 11일, B3.

완적인 성격에서 경쟁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연구원은 2015년 1월호 산업분석에서 중국 제조업의 추격 현황과 한국의 경쟁력 전망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데 아래의 도표는 현재의 한중 산업분야별 경쟁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2020년 정도가 되면 중국 대부분 산업의 경쟁력이 가격, 규모만이 아닌 기술, 품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¹⁸⁾

〈도표 1〉 주력산업에서의 대중국 경쟁 포지션

구분	이미 시장과 경쟁력 잠식 분야	경쟁력 격차 대폭 축소 분야
자동차	저가 A/S부품	와이어하네스, 와이퍼
일반기계	범용 플라스틱 금형	범용 NC선반, 굴삭기, 로터
조선	벌크선, OSV(해양지원선박)	탱커, 컨테이너선
석유화학	중저가 범용제품	
철강	저가 강재(철근, 열연강판 등)	일반 봉·형강/중후판, 합금철 등
섬유/의류	범용 봉제의류①원사②직물	고기능성의류①원사②직물
반도체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 패키징	
통신기기	피쳐폰, 통신네트워크장비	중저가 스마트폰
가전	LED LCD TV, 중소형 가전	UHD TV, 에어컨 등 대형 가전

(출처: 한국무역협회)

상기 도표를 보면 IT,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분야에선 아직 한국이 중국에 우세하며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격차는 별로 좁혀지지 않았지만 IT, 조선 분야에서의 차이는 점점 줄고 있다. IT 산업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 중 하나이며 TV,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기기는 이미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거나 바짝 추격하는 형국이다. 지난 1~2년 삼성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은 물론 샤오미(小米)에 고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섬유산업에서 중국은 봉제를 넘어 설비투자를 통해 섬유소재(원사, 직물) 품질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상기 도표 1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미 규모면에서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게임 세계 1위 기업 ‘텐센트’,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알리바바’, 중국의 구글로 겁

18) 매경이코노미 제1764호 (2015.7).

색엔진 전문 기업 ‘바이두(百讀)’ 등은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우주,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절감 산업은 중국이 한국보다 한발 앞섰는데 이는 기존 전통 산업으로는 세계 최대 산업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 중국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우주 항공 분야는 중국이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여객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수준이어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현 추세대로 가면 한중 양국 간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과 마찰이 확대될 것이며,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을 찾아내지 않으면 양국 관계 발전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의 무역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15년에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가 발효되어 향후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양국 간 무역현황을 보면 장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아래 도표 2에서 제시하듯이 2015년 한중 간의 무역은 전년대비 3.4% 감소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중수출은 2014년도 0.4% 감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6%로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대중 무역흑자도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작년에는 469억불로서 2011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물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전반적인 국제무역의 위축이 주 이유라고는 하겠지만 중국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산업발전 정책에 따라 자체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도표 2〉 한중 간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억불, ()는 증감률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교역액	2,206.2 (17.1)	2,151.1 (-2.5)	2,289.2 (6.4)	2,353.7 (2.8)	2,273.8 (-3.4)
수 출	1,341.9 (14.9)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4 (-5.6)
수 입	864.3 (20.8)	807.9 (-6.5)	830.5 (2.8)	900.8 (8.5)	902.4 (0.2)
무역 수지	477.5	535.4	628.2	552.1	469.0

(출처: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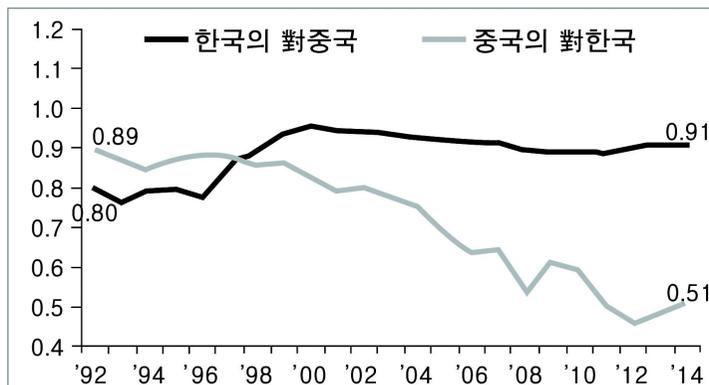
3. 한중 간 국력 차의 확대와 상호 인식의 변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한중 간 국력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8%로서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인 5,726억 6,500만 달러에서 대중 수출액(1,452억 8,7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차지했다. 같은 중화권인 한국의 대홍콩 수출액 272억 5,600만 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비중은 30%로 크게 확대된다. 무역보완도는 한 국가의 수출품 구성이 수입상대국의 수입품 구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의존도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국 무역보완도 지수는 0.91이지만 중국의 대 한국 무역보완도는 0.51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다.¹⁹⁾

아래 도표 3을 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큰 반면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1998년 이후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표 3〉 한중 간 무역보완도 추이

〈한중 간 무역보완도 지수(p)〉



자료: UN comtrade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대상산업은 석유·석탄,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등 8개 산업

19) 현대경제연구원 '한중경제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2016.3)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또한 아래 도표 4의 한국과 중국의 GDP 성장 추이를 보면 양국 간 GDP 차이는 1992년 수교 당시 중국이 우리의 1.2배였지만 그 이후 차이는 계속 벌어져 2014년 말 현재 7.3배로까지 되었으며 양국의 경제성장률 추세를 감안할 때 그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에 대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선을 넘어 그간 잠재되어 있던 중국의 한국에 대한 대국의식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한중 간의 교류에서도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중국의 부상 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중국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양국 간 큰 갈등이 없었다는 것도 그간 아시아기반투자은행(AIIB) 가입문제나, 북경에서 개최된 항일승전 70주년 행사 참석 문제 등 주요 사안에 있어서 대체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 4〉 한국과 중국의 GDP 성장

구 분	한 국	중 국	차 이
1992년	3,560억불	4,250억불	1.2배
1999년	4,860억불	1조 890억불	2.2배
2004년	7,640억불	1조 9,410억불	2.5배
2009년	9,020억불	5조 590억불	5.6배
2014년	1조 4,100억불	10조 3,470억불	7.3배

(출처: World Bank 통계)

양국 국민들 간의 상응하는 교류나 우호적 감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한국인들은 2000년의 한중 간 마늘 분쟁, 2004년 발생했던 동북공정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방대한 국토와 인구를 갖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중국인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적 대국 국민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이웃국가로서 이해관계가 밀접히 교차되어 있어 어업, 해양경제계획, 탈북자, 역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 감정적인 대립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양국 국민들 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중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IV. 맺는 글: 향후 한중 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제언

모두에서 기술한 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도 필요하며 동아시아 지역이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커다란 도전적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향후의 한중 관계를 가일층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북한 핵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한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 등에서 한중 간 정부와 민간의 각 레벨에서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전략적 소통을 통하여 상호간 신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²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간에 고위급 안보대화나 2+2 외교안보대화 등이 개설되었지만 그 활용도는 크지 않아 보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인 외교채널 외에 조용하게 막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메카니즘

20) 문홍호,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중 협력,' 『중앙일보』, 2016년 1월 1일, 29쪽.

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몇 년처럼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가 양국관계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은 정권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중국은 한국의 대외정책이 과연 연속성을 지니게 될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중 양국 간의 다양한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 지도자가 누가 되든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 나아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양국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중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노정될 경우에 필요에 따라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메시지 전달도 유용하겠지만, 한중 양국은 동양사회의 특성상 가급적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해 주면서 조용하게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 내에서는 한국도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개발은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거센 압력을 극복하기가 어려우며,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핵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개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²¹⁾

또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작은 국토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SLBM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자체의 핵 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핵을 보유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핵 억지력 측면에서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하겠다. 미국 전술핵무기의 도입도 핵 비확산 정책을 국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미국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WMD 무기이든 전통적인 무기이든지 간에 어떠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에 따른 확장

21) 채병건&유지혜, '대북제재, 북한 짓밟기 아니다 정신차려 비핵화하라는 것,' 『중앙일보』, 2016년 5월 4일, 1쪽.

역지력의 확보를 포함해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며 중국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당면과제는 철저한 대북 제재조치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 노력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6자회담은 과거 몇 차례 관련국 간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미래 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원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이라는 틀 자체는 유용성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필자는 현재 북한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한미중 3국 간에 대화체를 만들어 북핵문제 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추후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5자 협의체로 만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물론 북한은 희망하면 어느 단계에서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를 거부한다고 해서 한국과 중국, 미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측에서 한미중 3자 협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비록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고무적이다.²²⁾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수교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반도는 한민족에 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심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현 상태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으로서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작년 9월의 북경 전승절 70주년 행사 계기에 한중 정상 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다소의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국 내 대북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않으면 별 의미

22) 2016.3.20.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 북경 특파원단에 언급.

가 없다고 하겠다.²³⁾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거론하는 것이 당장은 현실성이 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과거 혁명과 전쟁 시의 친구이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계속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야말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평화적인 통일이 중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번영에도 대단히 유리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국 측에 전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전략적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안보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의 국익을 기초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직접 중국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2. 새로운 방식을 통한 한중 간 경제협력의 확대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입가공무역을 발전시키면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新常态)로 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을 심화시키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도농간 빈부 격차와 지방 간 발전 격차가 정치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생 문제도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중국은 양적 성장보다는

23) 필자의 2015년 10월호 '외교'지 칼럼, 172-173쪽.

효율적이고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²⁴⁾

이런 점에서 리커창 총리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통해 경제의 중고속 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달성해야 하며(雙中高), 이를 위해 내수 확대의 가장 큰 방안이며 최대의 경제구조 조정 효과를 갖는 신형도시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등을 통하여 공업화와 정보화를 융합시켜 창조적인 정신으로 선진제조업과 신형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리 총리는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개혁과 개방을 계속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신형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 바 있다.²⁵⁾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중국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의 변화에 유념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확대시키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2013년 12월 발간된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는 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내수용 일반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간재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소비재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이에 대해 당분간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유지하되, 중국의 산업 발전 과정이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중간재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진출 전략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⁶⁾

결국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중국의 대외 수출 제품의 원자재나 부품을 수출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내수를 위한 원자재나 완성재의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국 내 유통망에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2015년 말에 발효된 한중 FTA는 한중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 많고,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미진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양국 간 합의한 대로 2년 이내에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추가 협상이

24) 習近平, ‘關於『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 第13個 5年規劃的建議』的說明,’ 輔導讀本, 人民出版社.

25) 李克強, ‘全面建成小康社會新的目標要求,’ 상기 책자.

26)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69,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루어져 한국 기업이 중국의 서비스 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고 도농간 빈부격차나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도시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도시화 정책이 역으로 농민들의 도시빈민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0% 전후로서 80%가 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이 앞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도 투자와 무역의 새로운 대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적 경제성장으로 변환해가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내수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중간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난 수년간 한중 양국 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한중 양국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재생에너지, 환경, 기후 변화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지속 개발하자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분야 외에도 중국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 중인 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은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른 것으로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한국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즉, 창의적 발상과 투자를 통해 한국의 산업기술이나 문화적 수준이 늘 중국에 앞서나감으로써 중국이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3.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의 개선

한중 양국 간 국력의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은 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큰 틀에서 호혜 평등, 상호 존중의 관계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국의 식을 자제하고, 자신이 천명한 대(對)주변국 외교원칙인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외교방침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국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중국

을 인정하고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의 비합리적인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단결하여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부가 학계, 기업, 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을 하여 모두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중 양국민 간의 우호 증진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위한 문화·인문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정부 차원의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도 이미 2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포럼도 3차에 걸쳐 열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7억 명에 가까우며 그중 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는 220만 개에 이르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가입자가 2012년에 이미 3억 명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²⁷⁾

이는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이 폭발되어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역사나 문화면에서의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 양국 관계의 미래를 짚어질 청년들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서울과 북경 간만이 아닌 지방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7) China Daily 2015.12.15. World Internet Conference 기사 참조.

참고문헌

-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6/03/16/>, Message blocking the property of the government and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270(2016)).
- 2016.3.22. 중국국제문제연구원 Su Ge 원장, 필자에게 언급, 2016.4.28. 시진핑 주석,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의 기조 연설 참조.
- 2016.2.23. 워싱턴에서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부장의 공동기자회견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 시진핑,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차혜정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5).
-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2015.2).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docs/2015_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 왕이 부장, 기자들에 언급, 2016년 2월 18일자 Global Times 1면 기사.
- 미 태평양사령부 Harris 제독 언급, 상기 Global Times 2면 기사.
- 매경이코노미 제1764호 (2015.7).
- 현대경제연구원 ‘한중경제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2016.3).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 2016.3.20.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 북경 특파원단에 언급.
- 2015년 10월호 ‘외교’지 칼럼.
- 習近平, ‘關於『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 第13個 5年規劃的建義』的 說明,’ 輔導讀本, 人民出版社.
- 李克強, ‘全面建成小康社會新的目標要求’.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69,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China Daily 2015.12.15. World Internet Conference 기사 참조.

Abstract

North Korean WMD Threats and the future of Korea-China Relations

Shin, Jung-seung*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ries with close contacts in many areas from long time ago, and have shared interes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deepening economic relationship which has been mutually complementary in their nature. Therefore their bilateral relations has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to the extent that it can't be better than now.

However, the differences in their responses to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ensu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fire and the Chinese strong concern on the possible deployment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ce) anti-missile system in Korea show that there are some weaknesses in their relations. For example, Korea is not still confident that China would fully implement the sanction measures contained in the UNSC resolution and I argue that Chinese proposal of parallel negoti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replacement of Korean armistice with the Peace Agreement is not much persuasive. In THAAD issue, if Korea comes to conclusion in the future that THAAD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unter North Korean threats,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assure China that Korea-US alliance is not targeting China, and the THAAD is a defensive system, not damaging Chinese security.

In the longer-term, deepening strategic distrust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part of East Asia, changing na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revival of 'great country mentality' by

* Former Korean Ambassador to China, and a Chair Professor and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Chinese Studies of Dongseo University in Busan.

Chinese people together with the rising nationalism in both Korea and China would cast shadow on Korea-China relation in the years ahead, unless properly handled. In this regard, I suggest that the security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 further strengthened, and the tri-lateral dialogue channel be established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the US and China, particularly on North Korean issues. I also suggest the new pattern of economic cooperation be sought, considering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n China, while strengthening the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mor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peoples.

Key Words : Nuclear issues, North Korean WMD threat, China-Korea Relationship.

논문접수: 2016년 4월 5일 | 논문심사: 2016년 4월 26일 | 게재확정: 2016년 4월 29일